

# 건설소식

## 뇌물 준 건설사 첫 영 업정지

2개월..., 재개발 수주과정서  
1,000만원 건네

**뇌**물수수 건설사에 대한 첫 영  
업정지 처분사례가 나왔다.

서울 서초구로부터 2개월의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S사가 법원 항소  
없이 처분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대형건설사로는 2심에서 유죄판결  
을 받은 후 대법원에 상고한 시공능  
력평가 50위권대의 I사가 첫 영업정  
지 처분대상으로 유력시되고 있다.

### 처분업체 5개월 새 2배 늘어

건설산업기본법 38조2항의 뇌물수  
수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업체 수가  
급증했다.

건설교통부가 검찰 및 경찰로부터  
통보 받아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  
난 5월에 7곳 이었던 처분업체 수가  
지난 10월, 15곳으로 늘었다.

처분 유형별로는 뇌물수수액  
1,000만원 미만, 5년 이내 유사 위반  
행위가 없는 업체에 내려지는 경고처  
분을 받은 업체가 6곳 이다.

1,000만원 이상 뇌물수수 혐의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법원 항소  
및 상고로 처분이 유예된 업체가 7곳  
이고 처분에 앞선 청문일정이 잡힌

업체가 1곳이다.

특히 지난 2005년 11월 말 건설법  
개정 시행령이 적용된 후 1년 11개월  
만에 처음으로 영업정지 업체도 나  
왔다.

지난 5월 집계 당시 처분업체는 경  
고 4곳, 청문진행 3곳에 불과했지만  
5개월 사이 2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재건축 · 재개  
발 비리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수사결  
과가 속속 통보되면서 영업정지 처분  
업체도 급격히 늘었고 앞으로 더 증  
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영업정지 도미노 가시화

서울 서초구 소재 중소기업체인 S사  
는 작년 2월 재개발사업 수주과정에  
서 정비사업관리업체에 1,0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를 토대로 한 영업정지 처분은  
올해 8월 16일 서초구로부터 내려졌  
고 뇌물수수액에 따른 처분기간이 2  
개월인 탓에 S사가 이를 수용함으로  
써 첫 사례가 된 것.

다음 영업정지 처분대상 업체로는  
I사와 S사가 유력한 상태다.

지난 2005년 말에서 2006년 초 사  
이 정비사업체와 지역주민에게 19억  
5,000만원의 금품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I사는 1심, 2심 유죄판결  
이후 현재 대법원에 상고심이 계류  
중이다.

부도상태인 경기도 소재 S사는 항



소심에서 재건축 조합간부에 1억원을 준 혐의에 대해 일단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건교부는 이들 업체에 대한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추가 영업정지 확정 처분업체가 나올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내다봤다.

### 소액뇌물업체 경고처분도

뇌물수수액 1,000만원을 기준으로 건설업계의 대응방향도 확연히 다르다.

1,000만원 미만이고 유사위반 사례가 없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 없이 사전 경고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경고처분을 받은 6개 업체 대부분이 관할 지자체의 처분을 순순히 받아 들었다.

대형업체인 U사와 S사의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로 인한 피해 때문에 취소소송, 가처분신청 등을 냈지만 패소판결에 걸렸고 결국 소송을 취하하거나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제재조치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반면 뇌물수수액이 1,000만원을 넘을 경우 무조건 대법원 상고심까지 가는 추세다.

첫 영업정지 사례로 기록된 S사의 경우 극히 이례적이라는 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 시공상세도 시공사가 직접작성

### 시범사업 거쳐 2010년부터 의무화

2010년부터 공공공사의 시공상세도는 발주기관, 설계사가 아니라 시공업체가 직접 작성해야 한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의 설계 및 건적능력이 향상되고 설계업체의 불필요한 도면 부담도 30%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공공공사 발주기관이 설계업체에 의뢰, 작성하고 있는 도면 가운데 시공상세도를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실시설계 마지막 단계에서 실제 시공에 적용키 위해 작성하는 시공상세도는 건설현장 여건에 맞는 공사 단계별 세부 시공방식을 담은 설계도면이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설계·시공업체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난 1970년대 후반부터 시공상세도를 설계업체의 실시설계도와 엄격히 분리해 시공업체에 맞기고 있다.

반면 국내 공공공사의 시공상세도는 발주기관의 의뢰를 받은 설계자가 다른 도면과 함께 작성함으로써 시공상세도와 건설현장 간의 괴리로 인해 잦은 설계변경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건교부는 실시설계 중인 건설공사 10건에 대해 시공상세도 작성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2009년 말까지 시공상세도 작성 세부기준을 마련한다.

이어 2010년부터 발주되는 공공공사에 시공사의 시공상세도 작성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건설사의 시공상세도 작성이 의무화되면 그동안 실시설계에 의존한 기능적 시공 역할만 맡아 온 건설업계의 설계, 건적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동시에 불필요한 설계도면 부담이 30~40% 감소함으로써 설계업체의 경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반면 건설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로 인해 설계견적 능력이 낮은 중소건설사의 경우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D건설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의 경우 자체 설계팀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되지 않지만 중견, 중소건설사의 경우 별도 설계인력 보강에 따른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시공상세도 작성비용은 공사 설계내역서에 계상돼 준공 때 정산되며 일단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되 과학기술부가 별도 마련 중인 대가기준이 나오면 이에 따라 지급될 것”이라며

“설계업체 역시 상세도 작성업무가 없어도 되더라도 설계대가는 동일하며 오히려 과중한 도면 작성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로 4건과 철도, 수자원, 하천 각 2건씩 총 10건의 시공상세도 시범사업은 올해 말과 내년에 실시설계가 완료된 후 곧바로 사업자 선정

에 들어간 후 낙찰 받은 건설사가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적 요건에 맞춰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게 된다.

### 시공상세도 절차

실시설계 단계	실시설계 (Engineering Draw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계자 : 시공상세도 작성부문은 제외하고 설계, 도면에 note(主記) 및 시방서에 시공상세도 작성목록 명기, 시공상세도 작성으로 인한 철근 등 수량오차의 범위 명기</li> <li>• 발주자 : 동 내용 확인 및 설계준공</li> </ul>
↓		
시공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공상세도 (Shop Drawing)작성/보안</li> <li>• 공사시행 (Construction)</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공자 : 도면검토 · 시공상세도 작성, 구조적안전성, 수량오차 등 확인 후 발주청에 제출</li> <li>• 발주자 : 감리자의 승인, 중요사항은 발주청장 승인</li> <li>• 설계자 : 주요사항에 대한 자문</li> </ul>
↓		
준공단계	준공도면 (As Built Draw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공자 : 시공상세도를 포함한 준공도면 등 준공서류 제출</li> <li>• 발주자 : 준공처리</li> </ul>

## 리모델링 쉬운 아파트 평가, 구조체 · 설비 분리 여부에 달려

80점 이상 땀 용적률 혜택

**리**모델링이 쉬운 공동주택의 용적률 수혜가 구조체와 건축설비의 분리여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또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은 공동주택을 설계변경할 경우 리모델링 영향에 대한 재평가도 받아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리모델링이 쉬운 공동주택 세부기준’

을 고시했다.

평가항목은 세대 가변성(28~40점), 구조체 · 건축설비 분리(전용설비 분리, 공용설비 분리 각 13~20점), 세대 내부 가변성(8~20점)이며 소음 · 진동 · 실내공기질 등 법령기준 준수는 필수사항이다.

100점 만점의 평가에서 80점 이상을 얻으면 용적률 인센티브(최대

20%)를 받을 수 있다.

최소한의 리모델링 용이 구조를 갖춘 설계에는 기본점수(62점)가 부여되므로 인센티브 확보가 어렵지 않다는 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건교부는 다만 건축심의 통과 후 설계변경을 통해 구조를 바꾸는 편법

을 막기 위해 설계변경을 할 때마다 구조설계를 매번 재평가 받도록 규정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라멘구조에 내력벽을 설치한 아파트라면 배관, 배선용 독립공간, 공용설비 공용공간 등 구조체·설비 분리 여부가 용적률 인

센티브 수혜 여부를 가를 것”이라며 “건축공사에서 빈번한 설계변경도 어차피 재심의 대상이므로 구조상 고의적으로 변경만 하지 않는다면 인센티브가 철회되는 사례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리모델링 쉬운 구조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점수
세대 가변성	- 라멘구조, 무량판구조, 혼합구조	28~40
구조체와 건축설비 분리	- 구조체와 전용설비의 분리를 위해 배관과 배선을 위한 세대내부에 독립 공간 확보	13~20
	- 유지관리 용이도록 공용설비를 공용공간 또는 주동외주부에 위치 등	13~20
세대내부 가변성	- 세대내부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 비율	8~20
친환경성	- 소음·진동, 실내공기질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 이상 적용	필수

### 세금 체납업체도 공사비 빨리 받는다

#### 조달청, 온라인 정산시스템가동

**경**영 악화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했더라도 공사대금을 손쉽게 지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조달청은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업체도 나라장터를 통해 계약대금을 청구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채납세 정산시스템’을 구축, 제공한다

고 밝혔다.

현재 국세징수법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공사비 등 계약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체납한 세금이 없어야 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납세완납 증명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경영 악화로 세금을 못한 업체는 공사비 등 정부에서 받을 돈이 있어도 이를 제때 지급 받지 못해 다시 경영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시달렸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조달청은 체납한 세금을 대신 납부하고 이를 제외한 계약금액을 지급하는 채납세 정산제도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이를 수기로 처리하다 보니 대금지급까지 많은 시간이 걸려 제도 운영이 활성화 되지 못했는데, 이번에 채납 세금 정산을 온라인상에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에 들어간 것이다.

이에 따라 체납한 세금이 있는 업체라도 채납세 정산신청서를 온라인상에서 제출하면 신청 후 4시간 만에 체납액을 제외한 대금을 지급받

게 된다.

수기로 처리할 당시 수요기관의 검수, 검사과정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대금지급까지 최소 2~3개월씩 소요됐다.

조달청의 한 관계자는 “중소건설사의 경영상태가 악화되면서 세금 체납과 체납액 정산에 대한 문의가 크게 늘어났다”며 “이번 조치는 특히 중소기업사들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로서도 밀린 세금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세금정산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인)만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사업자용 공인인증서로 나라장터에 접속, 입찰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10월 1일 입찰공고분부터는 사업자용 공인인증서로 나라장터에 접속해 입찰서를 작성하고 이를 제출할 때 개인인증서로 사전에 등록된 입찰자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이에 따라 전자입찰에 참여코자 하는 업체의 대표나 입찰대리인은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개인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입찰대리인은 입찰일 마감 전일까지 등록해야 하고 자사 임·직원만 등록 가능 하다.

정부는 이를 위해 중소기업 해외진출과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해외인력난을 타개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까지 연내 내놓을 방침이다.

건설교통부는 SK건설의 싱가포르 아로마틱 플랜트(9억 달러) 수주를 계기로 해외수주고가 300억5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1965년 해외건설 첫 진출 이후 42년만에 최대 규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수주가능권 프로젝트의 수주 확정시점이 연말이나, 내년초냐에 따라 가변적이지만 보수적으로 잡아도 작년 실적의 2배가 넘는 350억 달러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 전자입찰 신원확인 실시

#### 조달청, 인증서 불법대여 방지

**개**인 공인인증서에 의한 입찰자 신원 확인 제도가 10월 1일 입찰 공고분부터 실시됐다.

조달청은 일부 업체들의 공인인증서 불법 대여 및 대리 투찰행위를 근절키 위해 ‘전자입찰 입찰자 확인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입찰자의 신원 확인은 온라인상에서 개인용 인증서를 통해 이뤄지며 신원 확인 결과 사전에 등록한 자격 있는 입찰자(대표자 또는 지정대리

### 해외수주 300억 달러 돌파

#### 50일 만에 100억 달러 추가

**해**외건설 수주고가 3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추가 수주 가능물량까지 합치면 올해 수주액은 작년 사상 최고치(164억 달러)의 2배가 넘는 350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고유가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산유국의 발주계획을 고려할 때 향후 3~4년간 200~300억 달러의 연간 수주고가 가능하다는 게 정부 분석이다.

### 공종별 신기록 양산

유례없는 수주고 속에 신기록도 풍성하다.

지난 8월 해외건설 200억 달러 돌파의 견인차였던 GS건설의 이집트 ERC 정유공장 건설공사(18억달러)는 플랜트 부문의 단독 수주 최대 프로젝트라는 금자탑을 세웠다.

쌍용건설이 지난달 수주한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샌즈호텔 공사(6억 8,000만 달러)도 건축부문 최대 프로젝트라는 역사를 새로 썼다.

해외 엔지니어링 수주고(10월 3억 1,000만 달러)도 사상 최고실적을 갈아치우는 것이 시간문제다.

이 관계자는 “현대건설이 수립한

싱가포르 파시르 판장 3·4단계 터미널 공사(6억3,000만 달러)의 최대 토목수주 기록만이 남았지만 50일 만에 100억달러를 추가 수주할 정도의 지금 분위기라면 이를 깨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 시장다변화 노력 결실

사상 최대 기록의 저변에는 고유가로 인한 세계 건설경기 활황세와 함께 주택시장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건설업계 노력과 정부 지원에 의한 해외수주 공중 및 지역 다변화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지역 면에서는 기존의 주력시장인 중동(217.8%), 아시아(296.3%)뿐 아니라 유럽(274.7%), 아프리카(109.3%), 미주 등 기타 지역(148.8%)의 수주도 100% 이상 늘었다.

공종별로는 플랜트 산업설비(221.4%) 외에 토목(238.8%), 건축(224.7%), 전기(192.6%), 통신(2,000%) 등이 고른 상승세를 보였고 건설엔지니어링 수주고도 10월 중

순 기준으로만 212건, 3억1,000만 달러에 달해 작년 전체 수주액(1억 600만 달러)의 3배에 육박한 상태다.

건교부 관계자는 "베트남, 중국, 몽골 등 3개국에서만 30건, 26건, 26건씩을 기록하는 등 이들 시장이 국내 엔지니어링업계의 주된 활동무대로 부상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 인력난 해소에 초점

건교부는 해외건설 황금기를 지속하기 위해 올해말 해외건설진흥계획을 전면 수정한다.

해외건설협회와 건설산업연구원 등이 마련 중인 황금기 대책은 기술, 금융, 인력 등 3개 부문으로 나뉜다.

기술부문에서는 해수담수화플랜트, 초고층빌딩건축기술, 초장대교량 등 VC-10으로 대표되는 연구개발사업과 한국형 U-시티 개발기법 고도화가 중점 추진되고 금융부문에서는 해외건설펀드의 확대방안이 모색된다.

현재 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인도네시아(한화건설)의 수마트라 석탄화력 발전소와 베트남, 알제리의 신도시 등 3개 프로젝트 가운데 1곳이 1호 펀드대상이 될 예정이다.

그러나 건교부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 준비 중인 대책은 인력대책이다.

건교부는 향후 3년간 5,100명의 해외건설인력(플랜트 2,908명, 토목 732명, 건축 1,116명, 기타 408명)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인력조달 및 양성 종합대책을 연내 내놓을 계획이다. 방안에는 해외건설 DB인력 재교육 시행 등의 단기대책 외에 중장기적인 해외인력 조달책이 포함된다.

특히 국내 인력은 물론 제3국 인력까지 포괄한 해외전문인력 센터 구축안이 눈에 띈다.

이 관계자는 "인력대책의 핵심은 제3국 인력의 효율적 조달이며 이는 제3국 인력서비스회사와의 연계, 제3국인을 포함한 종합전문인력 DB구축 등을 통해 2009년까지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



### 담배에 들어있는 발암물질과 독성물질

담배 연기에는 카드뮴 외에도 비소(개미 살충제), 부탄(점화액), 일산화탄소(배기가스), 청산가리(쥐약), 포름알데히드(시체 방부제), 암모니아(세척제) 등 온갖 발암물질과 독성물질이 들어있다. 그러다 보니 흡연이 일으키는 암도 폐암에서

그치지 않는다. 구강암, 인두암, 췌장암, 후두암, 방광암, 신장암, 자궁암 등 무려 8가지 암을 유발한다. 고질병에 걸리기도 십상이다.

「내 몸을 망가뜨리는 건강상식사전」 중에서